

한국의 대학입시행정*

崔 恩 洙**

목 차

1. 시작하는 말
2. 대학입시제도의 의미와 기능
3.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정
4. 대학입시행정상의 교육 및 사회경제적 문제
5. 교육 및 사회경제적 문제의 상존성의 원인
6. 대학입시행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행정의 발전 방향
7. 맺는말

1. 시작하는 말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또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이고도 계획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체의 행위' 라고 정의되며, 나아가 이러한 교육의 본질적 정의는 인간성 및 도덕성 회복에 바탕을 둔 창조적인 교육을 통하여 그 실현이 구체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완성을 위하여 국가적 및 공공 단체적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 결정, 집행하여 행정적으로 관할하고 도와주고 뒷받침해 주는 제반활동을 교육행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교육행정의 정의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육현실을 살펴볼 때에 한국의 교육행정은 개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잠재능력을 최대한도로 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교육적 및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서 이러한 이상적인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는 아직도 거리가 먼 듯하다. 한국교육의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시키는 교육행정상

* 본 논문은 1994년도 숭실대 교내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人文大 教育學 副教授

의 근원처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분야는 대학 입시제도를 중심으로한 대학입시행정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글은 대학입시행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대안점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선 대학입시제도의 개념 및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 성격이 기술이 되고, 대학입시행정상의 교육 및 사회경제적 문제와 원인이 분석이 되며, 대학입시행정을 중심으로 한 한국 교육행정의 발전 방향이 제시되고, 이어서 이 글의 결론이 뒤따르게 된다.

2. 대학입시제도의 의미와 기능

대학입학교사가 갖는 의미는 입학적격자 선발에 있는데, 이 입학적격자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두가지 관점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적성검사의 입장에서 말하는 입학적격자란 다른 아닌 입학하기에 알맞은 적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이며, 학력검사의 입장에서 보면 학력선발의 입장으로 대변되는 입학적격자는 교과학습에 관련된 개인의 과거 학업 성취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업 성취도가 개인의 교과학습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동일한 수준의 지능이나 적성을 가진 두 학생의 경우 좀 더 좋은 교육적 조건에서 학습하거나, 보충수업을 더 많이 받은 학생이 더 유리해질 가능성 조차 있다 (김호권, 1980, 8: 11-14).

대학입시는 대체로 세 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첫번째 기능은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대학강의를 터득할 수 있는 적성자를 선택하는 '수학 적격자 선발 기능' 이고, 두번째 기능은 고등학교의 교육목적, 내용, 방법을 규제하는 '교육적 기능' 이며, 세번째 기능은 그것이 사회 경제적 영역에까지 파급되는 '사회적 기능' 이다(정진환, 1982: 3).

교육법 제 108조에는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위하고 정치한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입시의 중핵적 기능은 입시를 치르는 학생 중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강의의 터득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다. 또한 대학과정을 성공적으로 이

수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그 일차적 목적이다.

3. 우리 나라 대학입시제도의 변천 과정

대학입시제도는 광복 이후 50여년 동안 잦은 제도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제도적 정착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또 입시제도가 고등교육의 성장 발전과정과 함께 끝없이 수정, 보완, 개혁을 반복하면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제도를 모색하려는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고등교육에 대한 철학의 빈곤, 고등교육관의 미확립 등으로 대학입시제도 개선의 맥을 이루는 기본 철학의 부재, 입시가 갖는 다양한 기능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그 동안의 입시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왔다.

해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대학입시제도들의 변천과정과 그 각각의 변화에의 필요와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인회, 1985. 1: 19-22; 윤정일 외, 1992: 207-218). 논문의 목적상, 변천과정을 우선 해방 후부터 1993년까지 그리고 1994년부터 현재까지 두 기간으로 나누어 기술하겠다.

가. 해방 이후부터 1993년까지의 대학입시제도 변천과정

1) 대학별 단독 시험제 (1945-1953)

우리 나라 최초의 대학입시 제도인 대학별 단독 시험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 대학 단독 출제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시험시기는 전,후기로 나뉘었으며 시험과목은 대학의 자율성에 입각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의 기본 과목에 한정하였다. 이 제도는 입학자의 절대 부족으로 빈번한 정원 미달사태, 농지개혁으로 인한 사학의 재정 확보 곤란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원 초과 모집의 부조리와 대학 입학을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병폐를 낳기도 했다.

2)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와 본고사 병행제 (1954)

일부 사립대학에서 재정확보를 위하여 학생정원을 초과 모집하는 등의 부조리가 성행하게 되자, 이에 따라 대학교육을 받기에 적합한 자에게만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하여 대학의 권위와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여론 하에 대학입학 연합

고사를 대학별 입학정원의 140%를 합격시키는 자격고사로 하였고 이 인원으로 전, 후기 및 추가모집의 3기에 걸쳐 본고사를 통한 선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제도로 인하여 권력층 자녀의 상당수가 불합격하자, 당해 3월 정부는 “각급 학교 입학은 일체 자유 경쟁에 맡겨라”는 지시를 통해 연합고사 무효화를 선언하고 본고사와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였다(동아일보, 1955. 1. 6).

3) 대학별 단독 시험제 (1955-1961)

이 시기에는 국가연합고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제도가 폐지되고 대학별 유사시험, 무시험제가 병행되었다. 내신제도의 실시를 권장하고, 각 대학에서 입학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신성적으로만 선발하거나, 또는 내신성적과 대학별 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선발하였다. 이 제도는 최초로 내신제를 활용하여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 바 크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대학간 학력 격차를 유발하였고, 당시의 문교부의 정원정책과 관련하여 각 대학에서 정원을 초과모집함으로써 대학생의 질적 저하가 문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국 영 수를 비롯한 특정과목에 대해서만 시험을 치룸으로써 중등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4) 대학입학 자격 국가고사제 (1962-1963)

이 시기에는 부정 입학과 무능력자의 입학을 막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의 본고사를 자격고사 겸 선발고사의 성격을 띤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로 실시하고,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실기고사, 신체검사, 면접의 결과를 대학 입학자 선발자료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것은 대학입학시험의 주체가 되어야 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였다. 또한 정원미달 사태의 발생과 이에 따른 고사의 추가 합격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여자 수험생들의 합격점을 낮춤으로써 운영에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속출하였다. 결국 1963년에는 국가고사는 대학입학자격 여부만 결정 짓고, 입학사정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대학의 적성검사와 대학입학자격 고사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학과별 입학전형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별 본고사에

의해 선발되었다.

5) 대학별 단독 시험제 (1964-1968)

2년간에 걸친 국가 자격고사제 실시는 정원 미달 사태 등의 문제를 노출하게 되어 정부는 대학입시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에 이르고, 필답 및 적성검사, 면접 등을 실시하는 대학별 단독 시험제가 부활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대학마다 입시 과목과 입학시험 기준이 다르고 해마다 입시과목이 달라짐으로써 고교생들의 입시준비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였다. 또한 각 대학에서 입시과목을 3-4개로 제한하여 대학입시에 예민한 고등학교는 입시과목 위주로 교육을 하게 되어中等교육의 비정상화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대학별 전형 형태가 다양각색이 됨으로써 입시제도 관리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또한 여러 대학들이 정원을 초과모집함으로써 대학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빚었다.

6)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본고사 병행제 (1969-1980)

대학별 단독 시험제가 일부 대학의 입시 부정, 정원 관리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정부는 대학입학 예비고사령을 공포하여 대학입시를 다시 관장하였는데, 예비고사는 원래 자격시험의 성격을 띄었으나 후에 입학 전형에까지 반영하게 되었으며, 후기에 들어서는 내신성적도 반영하게 되었다. 이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1979년 예비고사 적용 대상은 4년제 대학 및 교육 대학 입학자에 한하였으나 후기에 이르러서는 전문 대학 입학자까지 포함하게 되어 합격선은 정원의 200%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에 예비 고사의 합격선은 유명 무실하게 되고, 학생들에게는 불필요한 이중부담만을 안겨주어 폐지론이 팽배하게 되었다.

7) 대학입학 예비고사(학력고사)와 내신 병행제 (1981-1985)

이 시기에는 대학입학 예비고사에서 총 응시자의 90%가 합격하여 예비고사의 합격선이 유명무실해졌음을 감안하고, 예비고사와 대학별고사의 이중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취지아래 종래의 본고사를 폐지하고 고교 내신성적의 비율을 확대하여, 대학입학 학력고사(50% 이상)와 고교 내신성적(20% 이상)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었다.

본고사가 폐지되면서 고교교육 정상화 및 교사지위의 향상, 내신제를 통한 점진

적 고교 평준화의 실현 등의 좋은 점도 나타났으나, 대학의 학생 선발을 위한 자율권 침해, 고교의 지역 및 학교간의 격차를 무시한 동일 수준의 내신성적 평가 문제와 내신성적 자체에 대한 불신 문제, 고등정신능력 측정 미흡 등 비교육적 현상이 야기됨으로써 논술고사의 실시와 선지원 후시험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8) 대학입학 학력고사, 내신, 논술고사 병행제 (1986-1987)

이 시기에는 대학입학 학력고사의 문제점과 단순 암기 능력위주의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논술고사제를 도입하였다.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의 측정을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학력고사(50%이상), 내신성적(30%이상), 논술고사(10%이내)의 성적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그리고 논술고사는 사고력, 창의력, 질문력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논술고사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눈치작전, 배짱지원은 사라지지 않고 적성을 무시한 합격위주의 지원, 편중지원에 따른 미달사태가 나타나고, 논술고사의 채점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입학사정에 있어서 총점주의에 의함으로써 적성에 따른 대학진학이나 대학의 특성화를 저해하고, 내신성적 반영률의 확대로 고등학교 교실 내에서 지나친 경쟁률을 야기시키고, 대학 합격자의 학력고사 점수에 의해 대학이 서열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9) 대입 학력고사와 내신 및 면접 병행제 (1988-1993)

1988년부터는 눈치작전과 배짱지원을 없애기 위해 선시험 후지원에서 선지원 후시험으로 전환하고, 입학전형에서 면접고사 성적의 반영, 학력고사에서 주관식 문제를 출제하고, 논술고사를 폐지하게 되었다. 한편 내신성적은 입시총점의 최소 30% 이상을 반영하게끔 하였다. 그리고 고사의 실시, 채점, 결과처리 등은 각 대학이 책임 관리하되, 10% 이내에서 과목별 가중치 책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입시제도의 개선으로 눈치작전 및 배짱지원 등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과목별 가중치 적용으로 인하여 적성에 의한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대학은 중앙평가원에서 만든 문제를 배포 받아 시행함으로써 대학의 선발을 위한 자율권이 여전히 위축된 상태였다.

이상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정과 문제점들을 살펴 보면, 그 변천의 큰 줄기는 '대학별 단독출제 ⇨ 정부의 출제 ⇨ 양 제도의 병행' 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과, 대학이 대학교육의 적격자를 선발하는 주체로서 독자적인 자율권을 행사하는 데 충분한 자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정 입학, 정원 초과 모집 등 대학입시를 둘러싼 대학의 비리나 교육기회의 형평성 및 공정성의 보장을 저해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고, 예비고사와 본고사의 병행제가 장기간 지속된 특징을 지적해 낼 수 있다.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내신성적 및 대학 본고사 병행(1994-현재)

종래의 대학입시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차원 높은 대학 입학 정원 선발을 위해 교육부는 1994년부터 새로운 입시제도를 발표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94년부터 실시된 현행 입시안에 따르면 대학입시를 궁극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되 수능능력시험(30% 이하), 대학별 본고사(30% 이하)의 실시, 그리고 고교 내신성적(40% 이상)을 반영하되, 고교 내신성적을 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대학의 자율에 따라 임의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 이 제도는 대학에 본고사 실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입생 선발에의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시키고, 내신성적의 상향조정으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기본 취지였다.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능력을 알아 보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언어, 수리 탐구, 외국어(영어) 영역별로 통합 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력시험으로 규정된다. 그 성격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학업성적이면서 동시에 보편적, 일반적 학업 적성을 측정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된다. 그리고 특정한 교과별 시험이 아니라,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고, 문항 형태는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하고 '93년도에는 2회, '94년도에

는 1회 측정하였다. 그 목적과 효과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는 데 있으며, 고교 3년간의 학업 성취도는 물론 수험생의 잠재능력까지 평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타당성 높고 또 신뢰할 수 있게 대학수학 적격자를 효과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고력 중심의 문항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고교 수업이 사고력 계발에 역점을 둔 충실한 수업이 되도록 유도하며, 현행 9개 고사과목을 3개 영역으로 통합 축소하여 수험생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총점과 함께 영역별 점수를 밝히게 되므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고, 한편 학생의 조기 진로 지도를 유도하여 현재의 대학입학시험으로 파생된 심각한 과열 과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고교내신성적

고교 내신제에 있어서는 내신성적의 비율을 30%이상에서 4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였고, 종래의 내신성적 산출 영역이 교과성적과 출석성적(90%:10%)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교과성적, 출석성적, 행동발달 상황 및 교내외 봉사활동 성적(80%:10%:10%)으로 그 영역을 확대 조정하였다. 이것은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고교내신 성적이 '적격자 선발'에 가장 효과적이며 대학별 학력고사에서 소홀히 취급될 수 있는 교과목의 균형적인 운영과 지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내신성적 산출 영역을 '전인 교육'으로 확대한 것은 고등학교 교육에서 행동발달 상황, 특별활동, 교내 외 봉사활동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신성적의 비중을 강화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첫째로, 학교운영의 정상화와, 둘째, 고교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 도시 주변의 농촌지역 고등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 열의가 크게 높아졌고, 셋째, 종래의 학생 선발과정에서는 학생을 지도한 평가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교사의 지위가 저하되었으나 내신제의 실시로 교사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되었고, 마지막으로 내신은 고교 3년간에 걸쳐 측정되므로 1회로 측정되는 학력고사보다 예언 타당도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김형립, 1983. 11: 30-31).

3) 대학별 고사

대학별 고사는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대학내 계열이나 학과의 특성에 알맞는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험과목은 수험생의 부담을 고려해 3과목 이내로 실시하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거하여 출제하고, 국어 영어 수학은 수학능력시험과 내신성적에 상당 수준 반영되므로 피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출제 내용 면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준거로 하여 사고력, 판단력, 탐구력 등 고등정신능력을 주관식 위주로 측정하되 이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고려할 것을 요망하고 있다. 그리고 고교 내신이나 수학능력에서 측정하지 못하는 다른 어떤 능력을 측정하는 데 비중을 두며, 대학 학과의 수학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또는 자질을 평가하는 전공기초시험의 성격을 띠도록 하였다.

대학별 고사의 의의는 첫째, 대학이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을 책임 있게 선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장 중요한 자율성의 한 부분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의 학과 설치, 정원의 조정 등 교육운영 전반에 걸친 국가의 통제와 관할로부터 대학이 서서히 자율의 폭을 넓혀 가는 중요한 진전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둘째, 대학의 특수성이나 전공계열 또는 학과의 특성에 알맞은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게 됨으로써 적격자 선발의 기능이 강화된다. 계열별 주관식 문항의 출제시 각 학과가 중요시하는 분야에서 문제를 출제하여 그 학문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면접을 점수화 하여 대학의 설립 이념이나 목적에 알맞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함으로써 대학의 특수성을 추구할 수 있다.

셋째로 대학별 고사는 내신제나 수학능력시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영역의 능력이나 특성을 밝히고 입시전형 자료를 보다 다양화 시키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입학시험의 타당도를 높여준다 (장석우, 1991. 5: 36).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종전의 내신성적 반영 비율을 상향조정 (30%에서 40%로), 수학능력시험의 도입, 그리고 대학 본고사 제도의 부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새 제도가 각각 목표하는 바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 <입시제도의 공공성 확보>, 그리고 <대학 자율의 확대>이다. 이러한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이론적으로는 보다 개선된 제도임엔 틀림없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면

이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제도가 우리의 입시제도에 붙은 '입시지옥' 이니 '입시전쟁' 이니 하는 악명을 떼어주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이 입시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문선재, 1991. 4: 4). 그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던 좁은 문이 대학이라는 관문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톱니바퀴와 같은 현상의 하나로 무조건 대학에 가야 된다는 사회풍토에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대학입시제도만 고쳐서 수험생의 부담만 가중시켜야 하는가에 있다. 현행 입시제도가 가지고 있는 모순들을 세가지 선발전형자료 즉 내신제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 본고사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내신제도의 문제점

첫째로, 현 내신성적의 근본모순은 반영 비율에 있어 명목 반영비율과 실질 반영비율이 존재한다는 데 있다. 좀 더 세밀히 말하자면, 현행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되는 내신성적의 실질 반영비율은 4.9%에서 10%수준으로 오르는데 그치고 있다(문선재, 1991. 4: 5). 이것은 내신성적에 기본점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성의 자체적 모순은 표면적으로는 내신 성적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꾀하도록 하면서 실제로는 그 영향력을 적게 하려는 이중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임인재, 1991. 7: 34).

둘째로, 내신성적제도의 또 하나의 모순은 모든 교과목의 평균 성적만을 적용함으로써 특정 교과목에의 남다른 우수성이나 적성을 가진 학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임인재, 1991. 7: 32-33). 개성과 적성교육이 중요시되는 국제 산업사회에서 개성 없는 평균인만을 양성하는 결과를 빚는다는 것은 분명 모순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고교성적과 대학성적의 상관계수가 외국에 비해 우리가 낮은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셋째, 성적 산출시 성적 평가에 대한 불신이나 잡음을 없애기 위해 객관식 위주로 출제되는 학교의 시험들은 평가의 타당도를 희생시키면서 평가의 신뢰도나 객관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점수제로 평가한 후에 5단계 평가를

하는 불필요한 작업을 하는데 이것은 90점과 99점은 같은데 89점과 90점은 다르다는 모순을 낳게 한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점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수학에 있어 기초가 되고 공통적이며 보편적인 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이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적성 검사와는 다르다. 다시 말하면 중등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았을 때의 학업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이종승, 1991. 7: 20). 교육부에서는 매년 학력고사 문제를 출제 한 후 TV를 통해 “정상적인 고교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 라고 문제의 난이도와 경향에 대해 별 생각 없이 발표해 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첫번째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도 긴밀히 연관되어야 한다. 물론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심층적인 학문의 지향성 자체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교육제도의 근본 문제는 외면한 채 마치 교육방법만이 모든 교육제도의 주범인 양 대학입시제도만 조변석개 식으로 뜯어 고쳐 우리의 교육현실을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파생시키는 문제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당국에서는 수학능력시험의 주 목표와 기능을 ‘입시제도의 공공성 확보’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범교과서적, 탈교과서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 출제의 공공성 측면으로 교과 공부와 수학능력시험 공부를 따로 해야 하는 수험생 부담의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다 (이종승, 1991. 7: 20).

둘째, 학생들은 이제 국 영 수 (언어 외국어 수리 탐구영역) 위주의 과목에만 신경을 곤두 세우게 되며, 이에 따라 과열 과외의 분위기는 더욱 짙어질 것이 자명하다.

3) 대학별 본고사 제도의 문제점

본고사는 1980년에 과열과의 방지와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폐지되었던 제도인데 1994년부터 일부 대학에서 다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사 제도의 첫번째 문제는, 본고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인문계 수험생들은 영어, 수학, 국어를 자연계 수험생들은 영어, 수학, 과학을 어릴 때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고교교육 뿐 아니라 그 아래 중학교와 국민학교까지도 영 수 학 원화될 전망이 짙다. 일선학교에서는 능력별 반 편성이 불가피해지고, 본고사 부활로써 고교 교육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본고사의 부활은 심각한 입시난을 더욱 악화 시키고 대학 문을 더욱 좁게 할 수도 있다.

둘째, 현행 입시제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도입하고 있는데 본고사의 부활은 이와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교 3년 동안 내신성적을 꾸준히 관리해야 하고, 고3때 수학능력시험을 1번 이상 치르고 다시 본고사를 치르기 때문에 입시 부담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며 입시절차는 더욱 복잡하게 된다.

셋째, 대학간의 입시시험의 질과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1980년 7.30 교육개혁조치(내신성적 반영) 이전 본고사를 실시 한 적이 있다. 각 대학별 본고사가 학생 변별을 강조한 결과 고등학교는 대학입학 본고사 준비를 위한 것으로 전략을 하고, 소위 일류병 및 일류주의를 만연시키고 대학들 간의 입학시험의 질과 격차를 파생시켰다. 원래, 대학입학시험은 학생들 간의 개인차를 변별하여 고득점자를 선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학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을 것이다.

넷째, 본고사 실시에서 나타날 입시 과정에서의 비리와 부정, 그리고 본고사 실시 경우 각 대학 입학시험의 다양성으로 고등학교 교과과정 운영과 진로지도의 혼란 등의 문제점 또한 본고사 폐지의 이유이다. 이는 1980년 7.30조치 이전에도 드러났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기도 하다.

다섯째, 고등학교 수준에 알맞는 문제를 신뢰성 높고 타당성 있게 출제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의 체제 하에서도 입시문제 출제에 있어 고교 교육에서의 교과과정에 대한 시비가 엇갈리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더욱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별 출제 유형과 고교 수준의 맞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 그 결

과 정의로운 전형이 어렵고 중등교육과정의 변칙 운영이 초래되고 수험생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

여섯째, 본고사를 폐지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이점들을 고려해 보면, 우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상당한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입시에 쪼들려 생활하고 있는 지금의 수험생들 뿐만이 아니라 일선교교에 있어서는 교교 정상화를 향해 한걸음 더 다가서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는 과외 열풍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을 것이다. 심각한 과외 양상은 사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빈부 격차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도록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본고사 실시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각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면 이는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에 상당한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각 대학입시의 다양성에서 오는 고등학교 교과과정 운영과 진로지도 등의 혼란을 극복함으로써 청소년들은 더 밝은 모습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가 있고, 입학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방지할 수도 있다.

4. 대학입시행정상의 교육 및 사회, 경제적 문제

전술하였듯이, 한국의 대학입시제도는 적어도 단순히 대학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만의 제도가 아니라 고등학교의 교육방향과 수험생의 시험준비 및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제도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학입시제도가 대학에 있어서는 학생 선발권에 있어 제한을 받고, 고등학교 교육은 그 본질에서 벗어나 대학에 예속된 입시위주의 교육기관화가 되고 있으며, 수험생과 학부모는 과중한 입시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 대학입시행정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크게 교육,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나눌 수 있다.

가. 교육적인 문제

1) 전인 교육 저해와 그로 인한 학생들의 정상적 발달 저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국의 대학입시제도는 오늘날 그 교육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기능적인 면이 두드러진 상황이다. 즉, 고등학교 교육은 그 본질에서 이탈하여 대학에 예속된 입시학원으로 전락되고 있으며, 수험생과 학부모는 과중한 입시부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의 중등교육은 인격완성 교육으로서의 본질을 벗어나 학력,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와 빛나간 교육열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성과는 오로지 그 해에 명문대학에 몇명 입학시켰는가에 따라 달라지고, 이러한 경향은 고교교육의 현장을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비인간화와 차별화의 본거지로 변모시키고 말았다. 입시지옥에서 학생들은 전인적 자아실현은 커녕 오히려 절름발이 공부벌레가 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교과외의 중점은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소수 교과에 쏠리게 되어 자연이 그 외의 과목은 부수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되어 교육의 편식성만 조장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입시지옥을 방불케하는 교육현장은 과외의 폐해로 연결이 된다. 과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교육의 3대 기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지적, 정의적, 운동기능적 영역의 균형적인 발달을 통한 전인교육을 저해하고, 교육의 근본 목적과는 상이한 절름발이 인간을 기르는 데에 온갖 정열을 쏟고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는 중견국민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기능, 국가사회에 대한 건전한 비판력, 체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일반 교양을 기르는 데에 있는 것이지, 입시위주의 단편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과외공부가 오로지 '발등의 불'이라고 하는 대학입시 돌파작전이라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으로 인하여 학생의 건강과 정서발달에는 전연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판단력 등의 고등정신 기능의 발달을 억압시키고, 가족과의 대화를 단절시키며, 의존적 성격을 형성함으로써 자율적 학습태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법 제 1조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학생들이 받고 있는 교육은 어떠한가. 과연 그들의 꿈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인가. 현재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 더불어 학습자들이 받고 있는 과외학습은 점수따기식의 입시위주이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 결손학습에 대한 보충을 위한 과외는 아니

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전문 월간지 『우리교육』이 전국의 중고생 2천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의식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한겨레신문 1992. 10. 31), 우리의 청소년들은 네명에 한명꼴로 학원이나 개인지도를 통해 과외지도를 받고 있음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정신능력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교육이 아닌 단순 암기식의 교육을 학교에서, 또 과외에서 이중으로 받게 되어 정신적, 육체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년 자살한 초·중고생이 무려 150여명에 이르며, 또한 이들의 자살 원인의 2/3가 학교성적과 관련된다는 보고는 우리에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한겨레신문 1992. 10. 15). 이는 '91년 YMCA가 조사해 밝힌 '청소년들의 자살이유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인간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기계의 부속품과 같이 귀중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과외공부가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한국일보 1991. 9. 25).

2) 입시위주 교육의 만연으로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과 학교기능의 마비

현행 입시제도는 인권유린과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교육은 우리의 중·고등학생들에게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회의 그릇된 풍토 속에서 입시작업을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인권유린을 범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에게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만드는 교육'은 완전히 포기한 채 그냥 그들 먹이고 입히면서 점수 올리는 훈련만 시키고 있다는 면에서 책무 유기죄도 범하고 있는 셈이다.

3)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 풍조

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 학교의 기대가 서로 일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적 노력에 대하여 과외수업을 받는 학생들이나 그들의 학부모들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학교교육 전체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즉 학교교육은 대학입시에 하등의 효력이 없다는 근시안적인 판단 때문에 학교교육을 소홀히 하며,

교사에 대한 존경심마저 감소시켜 결국 학교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는 완전히 유리된 상태로 존속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과외공부만 철저히 따라가면 된다고 믿는 학생들은 이상집단을 형성하고 수업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학습분위기를 흐려놓게 된다. 반면에 과외지도비에 매력을 가진 교사들은 학습지도와 학생지도에 대한 무관심은 물론 기회가 있는 대로 교직을 떠나 과외전문교사로서의 명성(?)을 떨쳐 보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학생도 교사도 없으며, 교육마저도 부재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나. 사회경제적인 문제

서울 시내 1천 2백 44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의 내용은 수험생과 그 학부모에게 얼마만큼의 정신장애와 신체적 불균형, 그리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를 주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 보자면, 수험생의 가출충동 52.3%, 자살충동 43.1%, 학부모의 76%가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78%가 온 몸이 나른하고, 38%는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호소하였다(동아일보, 1992. 10. 22).

또 한가지 우리나라 입시행정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 중 하나는 고교 졸업자 중에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채 교육적으로 방치될 수 밖에 없는 비진학 및 미취업 청소년들의 대량적인 배출로 인한 사회적 문제이다. 현행 입시행정 구조상 고등학교 졸업자 70% 정도는 진학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학력위주의 사회 인식 속에서 이들의 자발적인 취업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진학 미취업의 상태는 진로 개척의 좌절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비행화하거나 반사회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농후하다고 보겠다.

한편, 이러한 입시제도의 사회적 폐해는 수험생들의 과외교습을 통한 경제적 폐해로 인하여 더 심각해지고 있다. 1991년 3월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의 중학생 4천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63%가 과외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에서 80%에 가까운 중학생들이 과외를 받고 있거나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강병구, 1991. 11: 123). 또 같은 해 9월 보고된 서울 YMCA '과외실태 조사'

결과도 이와는 차이를 보이지만, 과외 정도의 심각성은 마찬가지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도시의 중,고생 중 35%가 과외공부나 학원수강을 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응답자 중 22%가 과외교습을 받고 30%가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선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학생의 성적 정도와 관계없이 압구정동, 영동 등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80-90% 이상이 과외교습을 받고 있으며, 강북지역의 경우는 50% 이상이 과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외교습비는 한 과목 당 2만원부터 시작하여 200만원을 웃돌고 있는 것까지 천태만상이다. 그 실상은 서울 강남의 과외전문학원인 경우 4~6명으로 한 반을 구성, 개인별로 과목당 20~50만원씩 받고 주 2~3회씩 강의를 하고 있으며, 한 단계 낮은 속셈학원의 경우, 10명 정도를 한반으로 하여 주 2~3회씩 강의하여 10~15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개인 교습비는 학원수강비보다 훨씬 높다. 강남지역의 경우 과목당 주 2~3회에 30~1백 20만원, 강북의 경우 영어 수학 두 과목, 주 3회에 월 15~20만원씩 하고 있다. YMCA에서 조사한 결과 총 가계수입의 약 11%가 과외학원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학생 1인당 과외비로 지출되는 액수의 거의가 (85.1%) 최소한 10만원 이상이었으며, 과반수 이상이 (59%) 20만원 이상을 한달 과외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학생 1인당 평균 과외비는 276,100원에 달했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과외를 하는 학생도 3.4%에 달한다. 학원비로 지출되는 금액도 만만찮다. 학생 1인당 월평균 100,300원 정도다. 따라서 가구 월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1.1% 였으며, 월수입 71만원에서 110만원인 가정에서는 12.4%에 달한다. 과외비는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출혈을 감수해야 되는 사교육비' 짬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과외나 학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부업을 하는 가구도 9%나 되어서 과외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불안심리 경쟁심리를 표출하는 정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과외로 인한 학부모 자신들이 느끼는 가계부담 또한 크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은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과외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를 공교육비로 전환시킨다면 과대 규모 학교와 과밀 학급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교육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 비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하여 불합리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전체 국가경제에서 볼 때에 커다란 손실이다.

5. 교육 및 사회경제적 문제 상존성의 원인

위에서 열거한 대로, 비효과적인 대학입시행정으로 인하여 야기된 중등교육의 파행성,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심리적 부담, 비진학 및 미취업으로 인한 청소년 사회문제, 그리고 학부모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부담 등은 항상 우리들의 교육현장에 상존해 왔는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여러 측면에서 가능하다. 특히 대학입시행정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적인 측면과 교육행정문화 측면에서의 몇가지 근원적인 원인들이 다른 무엇보다 더 현저하다고 보겠다.

가. 교육정책적 측면

교육정책을 정의하여 이른바 '교육이념을 실현키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진로의 기본적 방향'이라고 하였을 때, 이러한 교육정책은 100년은 내다보지 못할 망정 최소한 10년 내지 20년은 내다 보아야 할 것이다. 혹자는 우리의 교육의 문제는 교육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교육정책다운 정책이 우리의 교육의 현장에서는 없었다는 말로 해석이 된다. 사실상, 교육정책이 변화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 결코 아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교육 역시 새로워져야 하며, 이에 따라 교육정책도 능동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교육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회는 종래에는 도태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에서의 교육정책은 변해도 너무 빨리 변한다는 것이며, 그 변하는 정책마저도 교육철학이 완전히 빈곤한 상태의 땀질식 변화라는 점이다. 땀질식 정책변화는 교육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에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편적으로 가해지는 임시 방편적 처방이기 때문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도 못할 뿐더러, 이러한 급조된 임시처방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어디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할지 불분명해지는 문제투성이의 악순환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우리의 입시제도는 해방이후 1945년 부터 1994년 변화까지 무려 10여 차례 바뀌져 왔는데,

대입 지원자가 폭주하기 시작한 80년 이후에는 2,3년 마다 한번씩 바뀌었다. 대학입시제도가 매년 변화할 때마다 그 근본적 문제의 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정책 당국의 시행착오가 되풀이되고, 수험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크나큰 혼란, 더 나아가 사회적 혼란을 가져 왔을 뿐이다. 이러한 대학입시정책을 비롯한 한국의 교육정책의 찰라적 변화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인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첫째, 교육권의 비독립성과 더불어 교육정책 및 행정집단의 비전문성, 둘째, 특정 이익단체를 위한 비민주적 정책결정과정 등이다.

첫째, 교육권의 일반 정치권으로부터의 비독립성은 일관성있는 교육정책 수립과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부는 행정부에 속함으로써, 교육부를 이끌고 있는 교육부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임명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특성과 더불어 장관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교육과 전혀 관련없는 정치적 및 기타 다른 문제로 인하여 그 임기는 평균 1년 5개월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에서 세워지는 교육정책 역시 조령모개식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하위 교육행정직은 지금까지 일반행정 관료들의 전유물이 되다시피 되어 왔고, 결과적으로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의 한 분야로 종속화되어 왔다. 실제로, 교육부의 실, 국, 과장 및 담당관들을 교육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제 2조 제6항이 개정 (1989. 12. 30. 법률 제4,183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직제규정은 이를 반영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1991)의 통계에 의하면, 교육본부에서의 직원 구성면에서 교육전문직은 24.9%인 반면에 일반직은 53.2%나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하부 교육청 조직에 있어서도 교육 전문성이 요청되는 주요 과장, 계장직 위에 일반적으로 보임하는 등 관리행정 위주로 되어 있어, 시,도 교육청의 직원 구성 현황면에서 교육전문직은 단지 21.8%, 그리고 하급 교육청에서는 25.1% 만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반직은 각각 47.2%, 4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에 47개의 교육대학원이 설치 운영되고 서울학에 교육행정연수원이 있으나, 교육행정요원 양성 및 연수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교육부와 산하 기관의 교육행정직의 교육문제에 관한 비전문성은 그 정도를 더하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상황 하에서, 우리의 교육은 자연히 정치권에 종속되어 '정치적 시녀화'가 되고 방향 감각과 전문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며 교육정책의 편의주의적 변화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입시행정과 관련지어 생각하여 볼 때에, 우리의 정치사를 분석해 보면 여러 번의 급격한 정치적 변동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교육정책 변화도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4.19의거와 5.16 군사혁명으로 제 2공화국에 이어 제 3공화국을 거치게 되면서 중학교 입학에 관한 과열 과외로 국민의 불만이 증폭되자 1969년에 '중학교 무시험 추천 입학제'를 실시하게 되었고, 1972년 10월 유신과 제 4공화국이 탄생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입시에 의한 국민적 위화감이 다시 재현되자 1974년부터 '고교 평준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곧다시 일부 폐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10.26사태 이후 제 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대학입시를 둘러싼 과열과외로 국민적 위화감이 다시 표출하게 되자 1980년 7.30 교육개혁조치 (과외금지 조치, 대학 졸업정원제 실시, 본고사 폐지, 고교 내신제 실시 등)를 내렸으나, 대학 졸업정원제는 실시 4년도 채 못되어 백지화 되었고, 과외금지는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었으며, 본고사는 94년도부터 일부 시행되었다. 이처럼 우리의 대학입시 교육정책은 그때 그때의 정치적 편의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중학교 입시문제를 고교입시로, 고교입시 문제를 다시 대학입시로 이전하는 순환을 계속하게 되었고, 이는 다시 입시위주 교육을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그리고 국민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 파급 발생시키는 역효과만 낳게 되었다.

둘째, 특정 이익단체를 위한 정책 결정과정 역시 우리의 교육정책을 자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교육정책을 수립하려면 그 결정과정에서 한 사람이나 소수의 현명한 정책적 선택이나 몇몇 특정 집단의 이익에 의해서가 아니고, 해당 교육정책에 관련된 모든 구성체들의 의견이 조화롭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책 수립시에는 그 문제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성체의 견해나 이익이 반영되어야 비로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원칙은 입시정책 수립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교육정책 수립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체들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국회, 정당, 교직원체, 신문, 방송, 각종 연구소 및 대학,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이라고 일컬을 때에, 최소한 입시정책만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여론이 가장 중대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입시정책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심각하게 느끼는 구성체는 수험생과 학부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우리의 입시정책 수립의 결정과정을 분석해 보면 학부모나 학생은 결정 과정에서 거의 절대적으로 배제된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특정 이익단체들의 이해 관계에 의해서나 또는 단발적인 사회적 상황에 의해, 또는 교육문제와는 거리가 먼 소수 엘리트 관료의 선택에 의해 교육정책이 좌지우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한 예로써, 한때 대학의 자율과 이익을 요구하는 대학의 목소리가 힘을 얻어 커지면 대학별 본고사로 갔다가, 입학 부정이 만연해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 되면 다시 국가관리로 되돌아 오는 식의, 학생이나 수험생의 고통이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이독경식의 입시정책 결정과정이었다.

나. 교육행정문화 측면

대학입시행정으로 인해 파생되는 중등교육의 파행성,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심리적 부담, 비진학 및 미취업으로 인한 청소년 사회문제, 학부모들이 짊어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 문제 등을 상존케하는 두번째 원인은 일제 군국주의와 지난 30여년 간의 군사문화의 유산인 권위주의적인 교육행정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일제 군국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교육행정 체계는 명령순응적이고 획일적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30여년이나 계속된 군사적, 권위주의적 전제정치는 이 나라 교육행정에 심각한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풍토까지 심어 놓았다. 특히, 1961년 군사정부 때부터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 까지 모든 학교는 특색이 없는 것이 특색인 획일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고, 거의 모든 일에 문교부(현재는 교육부)의 명령과 지시 및 감독에 순응하는 것이 타성화되어 버린 상태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허용한다고 하면서도 대학과 대학입시 운영에는 아직도 육부의 입김은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동안 대학 자체에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몇몇 사립대학들의 대량 부정입학, 각종 재단의 비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정작 교육부의 일방적 감독과 지시의 원인의 핵심은 다름아닌 군사문화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 스타일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행정의 본질과 대학 본연의 임무와 성격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정범모 외, 1993: 325). 원래 지독한 획일화와 타율적인 풍토에서는 여러가지 좋지 못한 부재현상들이 수반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개성, 창의력, 원칙, 책임, 윤리, 이념, 철학 등이 부재한 상태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의 교육은 개성과 창의력이 말살되고,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그 어느 누구도 교육의 파행성에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으며, 입시행정을 비롯한 모든 교육의 현장에서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진 것은 벌써 오래 전이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의 교육의 현장에서 이념과 철학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의 교육은 경제발전 일변도와 군사문화적인 사고방식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길들여진 '온실 교육'으로 이끌려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아직도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94년도 입시부터 실시한다'는 획일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이용은 대학의 선택에 맡겼지만, 오랜 타성에 비추어 볼 때에 전국 4년제 대학은 모두다 사용할 예정이므로 모든 고등학생들이 그 수험준비를 하도록 강요를 받게 될 것이다. 사실상, 지금부터 벌써 일선학교나 수험생, 그리고 학부형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부담을 막중하게 느끼기 시작하고 있고, 이를 위한 새로운 종류의 과외 형태 및 이를 위한 새로운 수험서들이 쏟아져 나와, 이러한 상황들이 과연 우리의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사실상,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그 취지나 문제유형에서 미국의 학업적성검사(SAT)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SAT는 전국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실시하는 기초학력고사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고등적인 정신기능을 측정하여 학생 선발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신뢰성있게 제공키 위해 교육검사사업단(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 의해 주관되어지는 시험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순한 학업성취도 검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성검사의 성격을 띤 것이고 실제로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음을 보아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방법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SAT 성적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는 반면에 요구하지 않는 대학도 있는데, 요구하는 대학일지라도 그것을 대학 입학전형자료 중의 일부로서 참고로 할 뿐이지, 우리처럼 그

것의 점수를 다른 것과 기계적으로 합산하여 점수 위주로 합격여부를 가리지는 않는다.

6. 대학입시행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행정의 발전 방향

지금까지 논의한 바 대로, 한국 대학입시행정에서 야기되는 주요 문제로서 중등교육의 파행성, 학생과 학부모에게 끼쳐지는 과도한 심리적 부담, 비진학 및 미취업으로 인한 청소년 사회문제와 학부모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부담이 거론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상존하는 원인으로서 첫째, 교육권의 비독립성 및 교육정책 행정집단의 비전문성과 특정이익 단체에 의한 비민주적 정책결정 과정에 기인하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찰라적 변화, 둘째, 일제 군국주의와 지난 30여년간의 군사문화의 유산인 권위주의적 교육행정을 들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과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학입시행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행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는가?

가.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방향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방향은 크게 한국사회에서의 바람직한 대학입시제도를 위한 정책 지향 원칙, 실제의 대학입시제도 개선안,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에 의한 기대효과와 파생가능한 문제점 및 보완책 등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1) 바람직한 대학입시제도를 위한 지향 원칙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바람직한 대학입시제도를 위한 정책지향 원칙 중 첫번째는 중등교육의 정상화이다. 이는 현행의 잘못된 입시위주 교육으로부터 탈피하여 전인 교육과 인간화 교육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교교육과 교사의 권위, 자율성 그리고 신뢰성 회복함으로써 대학입시에서의 고등학교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한다.

둘째 원칙은 교육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과 국가의 효율적인 발전이다. 이는 과열 및 고액 과외수업이 필요없도록 조치함으로써 수험생 능력 평가에 있어서의

부모의 사교육비의 영향을 배제하고, 농어촌 및 사회 소외층 출신의 수험생과 여타 수험생들과의 진학기회 확보 능력의 격차를 해소하며, 재수생의 감소로 인한 사회불안 제거 및 국가의 경제적인 운영 확대를 의미한다.

셋째 원칙은 학생의 교육기회의 확대 및 선택권 보장인데, 이는 교육의 기회 균등성을 실현하고 대학 입학지원의 횡수 및 시기에 있어서 교육 기회 확보를 위한 학생의 완전한 자유성을 보장함을 의미한다.

마지막 네번째 원칙은 대학발전을 위한 입학 적격자 선발이다. 이는 대학행정의 효율성 추구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 추구 및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입학생 선발의 자유성 확보를 의미한다.

위의 네가지 지향 원칙은 모두 같은 비중으로 추구되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 상대적 비중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밖에 없다. 한국교육 문제 해결의 당면성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우선 순위는 1) 고교 교육의 정상화 2) 교육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과 국가의 효율적인 발전 3) 학생의 교육기회의 확대 및 선택권 보장 4) 대학발전을 위한 입학 적격자 선발 순으로 여겨진다.

2) 대학입시제도 개선안

위에서 열거한 네가지 지향 원칙에 의거하여 고안된 현행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선발을 위한 기본 자료의 다양화이다. 여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고교 내신 성적 외에 개인 소개서 및 입학 후의 공부 계획서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가지 교육적 및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본고사는 폐지키로 한다.

둘째, 학생선발의 기본자료의 구체적 개념과 평가 및 사용 방법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그 개념을 언어, 수리 탐구, 외국어(영어) 영역별로의 고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통합 및 탈 교과적인 고등정신 능력에의 측정 평가로 정하고, 그 평가방법에서는 수학능력 점수를 입학 지원 자격점수로 하여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입학 지원생은 지원 대학의 자격점수만 일단 상회하면 되도록 한다. 즉, 합격 순위를 결정하는 데에는 수능점수는 영향력을 갖지

않도록 하며, 수험생은 고교 재학 기간 중 여러번 시험치를 수 있고, 여러 결과들 중 가장 좋은 점수를 입학지원 시에 제출토록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고교 내신 성적은 그 구성요소를 교과 성적 70%, 출석 20%, 특별활동과 교내외 봉사활동 10%로 한다. 그 평가방법으로서 교과성적은 상대평가에 의한 등급을 지양하고 절대평가에 의한 환산점수제로 전환한다. 그리고, 환산점수의 폭을 넓힘으로써 수험생의 변별도를 높인다. 각 대학은 계열별, 학과별 특성에 따라 각 교과목 환산점수에 자율적으로 상대적인 비중치를 가할 수 있다. 또한, 특별 활동 및 교내외 봉사 활동의 평가는 교사 3인 이상에 의해 절대 평가된 환산점수를 갖는다. 입학 지원자의 합격 순위는 고교내신 성적이 거의 100%의 영향력을 갖게 된다. 여기에서 “거의”라는 말은 내신 성적이 동점일 경우 사전에 별도로 마련된 평가기준에 의해 선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개인 소개서 및 입학 후의 공부계획서의 개념은 수험생의 자필로 기록된 자신의 성장 과정 및 적성, 지망 학교 및 지망학과의 지원 이유, 입학 후의 공부 계획과 미래에의 포부와 진로 계획 등을 기술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별 특성에 맞는 양식을 개발하고, 그 내용은 지원자의 최종 합격여부 결정 및 입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여 결정 시에만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셋째, 대학 입학 행정업무를 상설화한다. 교육부 산하에 (가칭) 대학청을 신설토록 하고 이 대학청은 대학교육을 비롯한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업무를 통괄한다. 각 대학 내에는 입학 행정업무 상설 기구를 두고, 수험생에게 학교와 과 그리고 입학지원 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며, 대학 입학시기에는 입학사정특별위원회를 둔다. 입시 시기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각 대학에 선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가칭) 대학청의 감사를 강화한다. 또한, 각 대학별 각과 입학정원은 완전 자율화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단, 대학청은 대학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입학 사정 업무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해되었는지에 대해 감사를 강화한다. 수험생은 여러 대학의 지원이 가능하나, 입학등록은 하나의 대학에만 해야 한다.

3)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에 의한 기대효과와 파생 가능한 문제점 및 보완책

지금까지 기술된 대학입시 개선안을 채택할 경우 위에서 이미 언급한 한국사회에서의 바람직한 대학입시제도를 위한 정책지향 원칙이 대부분 효과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특히,中等교육의 정상화와 교사의 사기 진작, 그리고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의 지출 문제는 효과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또한,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진학기회를 주고 또 일단 사회에 진출했다가 다시 배움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 요소인 재수생의 숫자도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점들이 부수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 내신 성적의 신뢰도 문제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각 지방교육청이 마련한 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수업교사가 수업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완전한 자율성을 갖도록 한다. 단, 기존 교사의 체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교사가 교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 그리고, 신입교사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예를 들어, 교사의 사회적 및 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을 통하여 우수한 젊은이들이 교직을 선호하게 한다.

둘째, 학부모의 치맛바람 극성화 문제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교사의 경제적 보수를 향상시키고, 성과급제도(merit system)를 치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교사의 도덕 재무장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교사의 도덕성 실추 행위시에는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교육자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반면에, 학부모의 과열된 비정상적 치맛바람에 대한 파행을 사회교육 차원에서 계몽하고, 학부모 윤리 강령을 제정한다. 학부모의 교육권의 오염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가시화하고 사회 문제화시킨다.

셋째, 내신 성적을 높이기 위한 과열 과외 성행 문제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만약 우수한 교사에 의해 수업의 내용과 방법이 다양화 되고 내신 성적이 수업교사의 책임 하에 완전히 자율화 될 경우에는, 학원강사(일명 쪽집게 선생)에 의한 고액과외 수업은 법적으로 막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수업 내용을 더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취지에서의 과외공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별도의 교육정책 수단(예를 들면, 발령 대기 교사나 임시교사 등을 수업교사의 보조 교사로 채용하여 교사의 근무조건과 수업의 질을 높이고 보충 수업을 이들에게 맡기는 등)을 대안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

넷째, 학생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교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일단 내신성적에 맞추어 전문대나 다른 대학에 입학하였다가 졸업성적이 평균 A 학점이 넘고 또 본인이 원할 경우, 자동적으로 정원에 관계없이 타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지역 혹은 학교간의 질적인 차이에서 오는 내신성적의 신뢰도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우선 사고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즉, 대도시 학교에서 받은 A 학점이나 농촌 학교에서 받은 A 학점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우선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철저히 교육받은 우수한 교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수행한 수업평가에 대하여 불신을 나타내는 것은 다분히 비교육적인 성급한 판단일 뿐만 아니라, 또한 두 학점간의 실질적인 차이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이 막연하기 때문이다. 사회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볼 때에 농어촌 지역에서의 A 학점이나 서울 지역의 A 학점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재정재원 배분시에 교육 시설과 인적 재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나 학교에 상대적 가중치를 높혀 주고, 이러한 지역의 교사나 학생들에게 별도의 정책수단(예를 들면, 특별 장려금이나 장학금 등)도 강구하여, 실질적으로 상향화된 고교 평준화를 이루도록 한다.

나. 대학입시정책의 개발 및 결정 과정의 새로운 모형 탐색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위하여 교육정책 형성의 결정과정에서 특정 소수 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육하부 기관과 기타 지역사회 단체의 실질적인 참여폭을 넓히도록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이르기까지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의 또는 자문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여러 구성집단의 의견을 수렴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현장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역기능적인 문제들과 항상 밀접한 거리에 있으면서 악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들을 참으로 위하는 교육정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교육의 중립성 확보 및 교육행정직의 전문성 강화

일관성있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정책 및 행정집단의 전문화를 이룩하도록 한다. 사실상, 일관성있는 교육정책이란 영구히 변하지 않는 경직성을 띤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있고 장기적이며 유연성이 있는 교육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다(구정태, 1992:83). 따라서, 이를 위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교육에 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부 장관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부 직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교육 전문직을 확대토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 산하의 교육전문직 및 일반 행정직원들에 대한 전문교육 연수를 강화한다.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1992)의 관련 통계에 의하면, 1992년도에 시,도 교육청의 직제 개편으로 보임되는 국가 공무원 4,000명, 공립 초,중 고등학교의 교육행정가인 교장, 교감 19,000명,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17,000명,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관리자까지 포함하면 교육행정 전문가의 수요는 약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7. 맺는말

이상에서, 대학입시행정을 중심으로 한국의 교육행정의 문제와 대안을 여러 시각에서 조명해 보았다. 그 동안 대학입시제도가 10여차례에 걸쳐 변하면서 시행되어 왔지만 입학적격자를 선발해 내려는 그 근본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현실에 부딪혀 여러 가지 모순점을 끊임없이 드러내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채 고교교육이 정상적인 지식의 탐구나 경험의 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시를 위한 학원의 역할만을 수행해 왔다.

현행 입시제도에서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내신제, 대학별 본고사 실시가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에 입각한 최선의 해결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바, 근본적으로 교육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면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고 그 사회의 독특한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사회 현실적인 면과 관련하

여 개선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도 그것을 개선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의 논란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입시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이 우리 나라 특유의 대학의 '좁은 문'이라고 하는 수요와 공급의 차에서 오는 현실을 인식하고 그러한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현실과 관련된 교육의 근본적인 제도적 요건을 개선하고 고학력자를 우대하는 학력 지상주의의 고질병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해결책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강무섭, 1990. 6: 71). 그리고 좁게는 입시제도 자체에 있어서 단순히 평가의 내용과 방법에만 집착하여 현행 제도를 뜯어 고친다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하고 수험생들의 지적, 학력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 대학은 정예주의에서 대중화 시대를 거쳐 보편화 시대로 체제를 개편한 지 오래인데 우리 나라는 아직도 좁은 문을 넓히지 않고 정예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등교육의 정상화와 입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입시제도의 개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대학교육의 시장경제화를 완전히 보장하고, 대학에 있어 입학정원 및 학과의 개폐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수학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 즉 야간제, 계절제,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등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실에 있어 대학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점교류, 전 편입학 등으로 경직성과 폐쇄성에서 벗어나야 하며, 정규 학제의 교실에서만 학위 취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독학사 학위 취득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는 등 종합적이고도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은 수학능력이 있는 국민이 언제든지 활용하고 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학입시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권의 중립성이 확보되고 교육행정직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졸속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수준에서의 통괄적인 교육정책이 채택되는 교육행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무섭(1990. 6). 과열경쟁 해소를 위한 입시제도의 방향. 새교육. 428, 66-71.
- 강무섭(1993. 8).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교육개발. 85, 72-75.
- 강병구(1991. 11). 학교교육 위협하는 과외열풍. 새교육. 445, 122-128.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1, 1992, 1993, 1994.
- 구정태(1992). 교육정책변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교육학 연구. 30(2). 71-85.
- 권이중(1992). 입시산업과 학교교육. 교육학연구. 30(1), 75-94.
- 김선중(1982. 3). 세계각국의 대학입시제도-미국-학업, 적성, 내신에 의한 선발. 신동아. 145-168.
- 김영채(1988. 3). 대학별 출제의 한계론적 전망. 대학교육. 32, 118-123.
- 김영화(1994). 교육열의 유형화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교육열. 교육진흥. 7(1). 142-153.
- 김인회(1985. 1).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 변천의 성격과 의미. 대학교육. 13, 18-23.
- 김종서(1985. 9).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새교육. 371, 133-151.
- 김헌규(1984). 대학입시에 있어서 고교내신성적 적용 개선방향. 동국대학교 논문 집. 143-169.
- 김형립(1983. 11). 내신제의 전망과 과제. 새교육. 349, 30-39.
- 김호권(1980. 8). 대학입학교사의 기능. 교육개발. 7, 11-14.
- 김호권(1990. 1). 대학입시의 자율화와 합리화. 대학교육. 43, 60-66.
- 김홍주(1991. 10). 대학입시정책평가를 위한 준거체계 탐색. 한국교육. 18, 333-356.
- 대학교육(1992. 7). 대학별고사의 출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대학교육. 58, 99-105.
- 대학진학사 편집부(1992. 9).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무엇인가?. 입시저널.

104-113.

- 동아일보. 1955. 1. 6.
- 동아일보. 1992. 10. 19.
- 동아일보. 1992. 10. 22.
- 문선재(1991. 4). 새 대학입시제도를 보는 또 다른 시각. 교육개발. 13(2), 4-9.
- 박도순(1991. 5). 대학입시제 변천과 새 제도의 고찰. 대학교육. 51, 10-17.
- 새교육(1991. 11). 기획취재-학교교육 위협하는 과외열풍. 122-128.
- 손인수(1980. 5). 입시제도의 변천과정. 새교육. 307, 30-36.
- 송병순(1992. 6). 입시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 교육학연구. 30(1), 19-31.
- 신상렬(1983. 11). 고교내신제의 제문제. 새교육. 349, 63-67.
- 오일환(1993). 1994학년도부터의 대학입시에 대처하는 인문고교의 입장. 사학. 17-22.
- 윤정일 외(1992). 한국의 교육정책(2판). 교육과학사.
- 이규환(1985. 1). 외국의 대학입시제도—영국,서독,일본을 중심으로. 대학교육. 13, 24-29.
- 이인호(1993).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제안. 교육진흥. 봄. 계간지 교육진 흥. 15(3), 64-79.
- 이종승(1991. 7).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영역과 출제방향. 대학교육. 58, 19-23.
- 이 중(1985. 1). 대학입시 개혁 : 그 미래적 전망. 대학교육. 13, 42-47.
- 임인재(1991. 7). 내신제의 문제점과 개선안. 대학교육. 58, 31-35.
- 입시저널(1992. 9).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무엇인가?. 입시저널. 104-113.
- 윤정일 외(1992). 한국의 교육정책(개정판). 교육과학사.
- 정범모 외(1993). 교육의 본연을 찾아서. 나남.
- 장석우(1991. 5). 대학입시 자율성과 대학별 고사. 대학교육. 57, 35-39.
- 정진환(1982). 대학입시의 교육적 의의. 동국대학교 논문집. 1-7.
- 차경수(1985. 1). 대학 신입생 선발의 본질과 방향. 대학교육. 13, 13-17.
- 최 은 수(1995). 한국교육행정의 현안문제. 양서원.

한겨레신문. 1992. 10. 15.

한겨레신문. 1992. 10. 31.

한국일보. 1991. 9. 25.

한정신(1992. 6). 대학입시제도와 중등학교 교육. 교육학연구. 30(1). 41-49.

한준상(1992). 한국교육의 민주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허 형(1983). 내신제를 위한 평가범위. 새교육. 349, 40-62.

황정규(1985. 1).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대학교육. 13,
31-35.

Abstract

Educational Administration for College-entrance Examination in Korea

Choi, Eun-Soo

The study analyzed 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college-entrance examination for the past 50 years and indicated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solving problems rooted in the field of Korean education.

Even though more than 10 big changes, the present system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for college-entrance examination is not considered satisfactory and desirable. This is based on some problems such as distorted secondary education, psychological over-burden on students and parents, social youth problems due to their failure in entering colleges, and serious economic burden on parents to provide for private tuition fee for their children. These problems are caused by some factors: dependence of education on politics, non-professional human power in the field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for policy, inconsistent policy changes based on non-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and authoritarian pattern in administering education.

Some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 1)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from politics should be guaranteed.
- 2) Profession of staffs in the field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should be enforced.
- 3) Systems of college-entrance examination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reflect opinions of students and parents more widely, realizing democratic educational administration.